

#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 vs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안맞아”

●정치권·대통령실 ‘尹구속’ 반응

민주당 “내란 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 법원 판단”

국힘 “헌직 대통령 구속 따른 파장 고려됐는지 의문”

대통령실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하락 우려”

헌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 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오적 마타도어로 국권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직 대통령으로서 도구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

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비상개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추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 윤 대통령 구속 주요 쟁점 및 법원 판단

- 1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윤 대통령 출석
- 19일 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청구배경	공수처 주장	윤 대통령 주장	법원 판단
범죄 혐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2·3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 윤 대통령이 그 정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자 고유한 통치 행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음.	해당 혐의 소명 판단* (사실상 인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 3회 불응 이후 체포·진술 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 석방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헌직 대통령. 검경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 이미 충분히 확보.	'증거인멸 우려' 직접 언급

\*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모든 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법원행정처장 “참담... 판사 신변 지장 없게 조치 강구”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

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

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법원 직원들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할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관해 묻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헌직 대통령 경호 계속... 구치소 담장 경계

담장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 권한 나눠... 범위 등 협의 필요

헌정사상 헌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헌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헌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 당국 간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48시간간 체포 기한과 달리 공수처·검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20일이라 협의의 필요성이 체포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 검정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검찰, 서부지법에 차장검사 팀장으로 9명 전담팀 수사

경찰, 전국 지휘관 회의 소집 “묵과할 수 없는 사태”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팀장인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

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에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장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기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청도 이날 “주동자는 물론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한 뒤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도경찰청에도 향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선 단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모든 집회, 시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회의에선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폭력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 파악과 경비 태세를 강화해달라는 당부도 전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18일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명이 연행됐다. 19일엔 영장 발부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나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4명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체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수감 전망 서울구치소 독방 내부

약 10.08㎡ (약 3.04평), 일반 수용자 6~7명 방 개조

※ 실제 내부 배치와 다를 수 있음

- 구치소 입소 절차
- 수용번호 발부
- 정밀 신체검사
- 미검수용자복 환복
-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
- 독방 수용

▶1면 ‘...尹 결국 구속’에서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 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는데, 오는 20일경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

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구속 뒤 첫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조사 일정을 재정보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 본부는 이날 공지 문자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급일 중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